

##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및 집행체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 책임자 : 박두용(한성대학교 교수)

연구기간 : 2010.06-2010.10

등록번호 : 정책분야-연구자료 2010-연구원-994

산재예방효과 및 산재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로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및 집행체계가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연구는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및 집행체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최근 규제 행정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 행정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경제개발 도입단계와 경제성장 단계를 거쳐 함께 변화해 온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이 1997년 이후 노사정책이나 노동통제에서 실업대책이나 고용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였다.

그 결과 노동부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으며,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그 위상이나 위치가 애매해진 경향이 있어, 향후 산업안전보건 행정 및 집행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매우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및 집행체제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의 연혁과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다.

이론적인 고찰에서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범주를 파악하였고,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규제이론, 산업안전보건 행정서비스론, 산업안전보건 집행체계, 지방자치와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검토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과 집행체계를 거시적으로 파악,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 행정, 집행체계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로 문헌고찰과

연구자들 간의 토의 및 논의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의 연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규제이론과 산업안전보건 행정서비스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집행체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와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검토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이론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기준 및 이론에 대해 정리한 후, 지난 2010년 3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사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문제점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주요국가의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과 집행체계를 거시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각 국의 관련 부처의 명칭과 기능 그리고 노동 행정의 주요 내용과 부처 행정에서 노동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 및 기존 연구결과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는 중앙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OECD 국가 중에는 소관 중앙부처와는 독립적인 별도의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외청 또는 책임운

영기관 단위에서 산업안전보건 행정을 하는 국가는 모두 8개국이었다고, 대부분 산업안전보건 행정으로 특화된 조직이었다. 대부분 이러한 국가의 산재율이 매우 낮은 특성을 보였다.

연구의 마지막에는 향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및 집행체계에 대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유형화 및 준거의 틀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 감독수단으로 교화형과 처벌형, 둘째, 산업안전보건 감독 유형으로 일반 근로감독과의 통합형과 산업안전보건 전문 감독형, 마지막 세 번째 준거로는 산업안전 감독관의 재량권에 대한 것으로 낮은 재량권 부여와 높은 재량권 부여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산재율을 감소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 개발 및 행정집행 방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규제행정의 기본틀로 도입하고자 하는 위험성평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체계 및 집행체계를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 설계나 조직개편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이나 집행체계를 설계하는데 기본적인 참고자료 또는 매뉴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